

당 무능·호남 홀대에 민심·당심 이반

“주류 헌신 없는 독주...수권 비전 없다” 전통 텃밭 등 돌려 총선 앞두고 호남 권리당원 되레 감소...집단 탈당 우려도

위기의 새정치 왜?

새정치민주연합의 핵심 지지 기반인 광주·전남지역 권리당원 10명 가운데 7명이 이상이 당비를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이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비를 내지 않는 권리당원이 75%에 이르고 있다는 점은 민심(民心)도, 당심(黨心)도 떠난 새정치연합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당비 미납 권리당원이 75%를 넘어선 배경에는 당내 경선에서 지지하는 당

원 비중이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과거 총선 경선에서는 당원 비중이 50%였지만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는 내년 총선 경선 룰로 ‘안심번호 도입을 전제로 100% 시민으로 구성하는 국민공천안’을 관철시켰다.

또, 안심번호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문·안·박 연합을 문 대표가 30% 비율로 선거인단을 꾸리기로 했다. 사실상 투표권이 상실되거나 대폭 축소되면서 권리당원이 설 자리를 잃은 것이다.

권리당원의 당내 경선 참여 여부가 확실치 않게 되면서 현역 국회의원과 정치인

인들의 권리당원 모집과 관리도 시들해져 당비 미납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광주의 또 새정치연합 권리당원은 “그동안 당비를 꾸준히 납부했으나 총선 후보 경선에도 참여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자존심이 상해 당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당비 납부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당원을 누가 하겠느냐”고 말했다.

여기에 새정치연합에 대한 깊은 실망감도 권리당원의 당비 미납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정권 창출의 비전을 제시하기 보다는 눈 앞의 공천 지분을 놓고 이전투구를 거듭하는 정당이 누가 당비를 내고 당원을 자처하겠느냐는 것이다.

특히, 당내 주류 진영의 ‘헌신 없는 독주’와 지역 정치권의 무기력에 대한 호남 권리당원들의 분노가 상당하다는 것이 전

반적인 평가다.

여기에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신당 바람도 새정치연합 권리당원들의 마음을 돌리고 있다. 신당이 성공적으로 출범하게 되면 지역 정치권의 재편이 급속하게 이뤄지면서 새정치연합 권리당원들의 집단 탈당 사태도 줄을 이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핵심 지지 기반인 광주·전남의 권리당원 조직이 와해되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신당이 출범하면 그동안 새정치연합에 몸을 담았던 정치권 인사들이 권리당원들과 대거 신당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며 “광주·전남지역에서 권리당원들의 대규모 탈당 사태가 가시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속타는 ‘선거구 획정 협상’

野, 주중 정개특위 간사간 접촉...재개여부 주목

지난주 타결에 실패한 선거구 획정 협상이 이번 주부터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대표와 원내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까지 참여한 ‘4+4’ 회동에서도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여야는 냉각기를 가진 후 정개특위 여야 간사가 만나 선거구 획정안 협상을 재개할 계획이다.

지난주 4+4 회동에서 여야는 농어촌 지역구 감소 최소화를 위해 비례대표의 석수를 7석 줄여 지역구를 253석으로 늘리고, 사표 방지와 표의 등가성 제고를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50% 적용하는 이병석 정개특위 중재안을 도입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여당이 주장해왔던 국회 선진화법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병석 중재안도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협상은 결

렬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현행대로 지역구 의석수를 246석으로 가던지, 비례대표를 줄여 좀 늘리던지) 그 선택을 야당이 빨리 해야 한다. 여당 입장에서는 비례대표를 줄이는 것이다. 안 줄이면 복잡하고 농어촌 지역구를 살리는 것도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다시 여당에서 현행 기준대로 하자고 하자,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4개월 전에 정개특위 여야 간사가 합의했던 현행법에 근거한 선거구 획정안 여당이 뒤집어 새롭게 협상을 시작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현행대로 하자고 하면 그동안 노력은 뭐가 되느냐는 것이다.

야당은 이번 주중 정개특위 간사 간 접촉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여당에서 협상안을 제시해야 실질적인 협상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위기의 文 ‘희망 스크럼’으로 난국 돌파?

“총선·대선위해 힘 모으자”

문·안·박 협의체 다시 부상

박원순 긍정적·안철수 부정적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호남지역을 하라과 당 내분으로 위기에 빠지면서 일종의 대권주자 협의체인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희망 스크럼’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문·안·박 희망 스크럼은 문 대표가 지난 5월 박원순 서울시장과 회동한 뒤 밝힌 구상으로, 당의 단합과 총·대선 승리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 세 사람이 힘을 모으자는 것이 골자였다. 그러나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이후 문 대표의 재신임투표 논란 등 당 내분에도 혁신위원회 발(發) 혁신 정국에서 안 전 대표가 문 대표를 향해 각을 세우면서 좀처럼 계기를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문 대표 측은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천정배 의원을 끌어들이기 위해 통합선대위 구성을 기대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자 다시 희망 스크럼 쪽에 희망을 거는 양상이다.

문 대표 측은 “당내에서 문·안·박 협력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만큼 추이를 좀더 지켜보자”고 말했다.

중립성향 중진급 인사 8명의 모임인 ‘통합협동’이 주초 문 대표와 안 전 대표가 더 큰 혁신을 위해 화합할 것을 촉구하기로 한 것도 이런 움직임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 시장은 조만간 안 전 대표를 만나 동



“재외국민투표권 꼭 행사합시다” 13일 오전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실시한 ‘200만 재외국민 유권자 선거권 등록 캠페인’에서 문재인 대표(오른쪽에서 두번째)가 포스터를 살펴보고 있다. 2016년 4·13 총선에 투표하려는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연합뉴스

참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희망 스크럼 구성에 적극적이다. 문 대표가 희망 스크럼에 기대를 거는 것은 혁신위가 마련한 ‘공천혁신안’의 관철을 위해서다. 문·안·박 연합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안 전 대표가 희망스크럼에 대해 부정적 생각이 매우 강해 성사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

문 대표 측은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개

문발차’ 형태로 일단 안 전 대표를 제외하고 박 시장, 안 지사, 김 전 의원 등 나머지 인사를 중심으로 희망스크럼을 출범시킨 뒤 안 전 대표의 동침을 끌어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문 대표의 호남 지지율이 두 달 연속 한자릿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3일 한국갤럽의 11월 둘째 주(10~12일) 여론조사(신뢰도 95%,

오차범위 ±10%)에 따르면 문 대표의 호남 지지율은 5%로, 박원순 서울시장(26%)과 안철수 전 공동대표(14%)에 뒤졌다. 특히 오차범위권 하지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9%)보다 낮았다는 것은 충격적인 부분이다. 문 대표의 호남 지지율은 한 달 전인 10월 둘째 주 조사에서도 8%로, 김 대표(9%)에게 오차범위에서 밀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친박發 개헌론 정치권 ‘들썩’

홍문종 이원집정부제 ‘장기집권 플랜’ 의견 부분

새누리당의 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계에서 개헌론을 제기하자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친박계 핵심인 홍문종 의원은 지난 12일 KBS 라디오에서 “5년 단임제 대통령령제는 이미 죽은 제도가 됐다”면서 “외치를 하는 대통령과 내치를 하는 총리로 이원집정부제를 하는 게 훨씬 더 정책의 일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친박계는 개헌에 부정적이었다. 지난해 10월 김무성 대표가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개헌론을 꺼냈다가 하루 만에 청와대를 향해 사과했을 정도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친박계는 개인적 의견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그 의미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외교를 담당하는 대통령으로 세우는 동시에 친박계 총리, 특히 대구·경북(TK)에 근거지를 둔 최정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면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홍문종 장관 후반기에 나오는 개헌론은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을 떨어뜨린다는 분석이 많다. 이는 정에서 당 주류 인사가 굳이 나서서 이를 언급한 데 대해 의아해 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한 정치권 관계자는 15일 “어차피 개헌론은 또다시 떠오르게 돼 있다”면서 “오히려 먼저 제기함으로써 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주류가 뭉쳐서 권력 누수를 막는 효과를 거두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박준영 신민당 광주시·전남도당 이달 출범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주도하는 가정신민당이 광주·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창당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15일 신민당에 따르면 박 전 지사 등은 지난 14일 광주에서 전남도당 출범을 위한 지역 책임자 등 인선 방안을 논의했다. 모임에는 전남지역 전·현 도의원, 전 자치단체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모임에서는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 총선, 대선

에서도 야당의 승산이 낮다고 보고 신당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참석자들의 의견이 많았다고 준비위원장 박준영은 전했다. 신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이달 중 출범식을 열 계획이다.

신민당은 다음 달 중 창당대회를 하고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기에 맞춰 창당대회를 할 방침이다. /최권일기자 cki@



꿈, 희망, 열정, 행복의 “광주공고”

세계 최고 기술명장을 말한다.

A world-class institution leading the way in technology and innovation

2016학년도 NCS기반 신입생 전형요강

1. 모집 학과 및 정원 (남·여 공학 144명 420명) 학과별 모집

구분	학과	정원	기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합계	기계	2	3	2	1	2	2	2	2	2	2	2	2	2	2	2
	전기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모집 지역: 전국단위 신입생 모집

3. 전형 일정

4. 전교생 특성화고 다양한 장학금 지원 혜택

5. 기타문의: http://gshs.kr 학교 홈페이지 신입생 모집 참조

2016학년도 전기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에서 21세기 글로벌 엔지니어 리더에 도전하십시오!!

직장인을 위한 야간 강의 실시 [주 1~2회, PM 7시~11시]

■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알찬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전형 일정

구분	일정
입학원서 작성	2015. 11. 9.(월) ~ 2015. 11. 20.(금) 09:00~18:00
입학원서 접수	2015. 11. 9.(월) ~ 2015. 11. 20.(금) 09:00~18:00 (아침입학도착분까지 유효)
합격자 발표	2015. 12. 22.(화) 11:00(산업대학원 홈페이지)

■ 모집학과

■ 문의

송원대학교 광고 제2015-1116호

교육용기본재선(아파트) 매각 공고

1. 입찰물건: 송원대학교 교육용기본재선(아파트) 매각

구분	소재지	지번	등-호	구조	층면적(㎡)	비고
아파트	광주시 서구 내동동	475-1외3 (송원대학내 아파트)	XX-125동 3층호	철·콘 아파트	1,742.59	40.04㎡(13평) 8호
						64.53㎡(19평) 28호
						83.38㎡(25평) 39호
						계 39호

2. 입찰일시: 2015. 11. 30(월) 14:30

3. 입찰장소: 송원대학교 대학본부2층 회의실

4. 입찰등록

5. 낙찰자 결정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송원대학교 입찰요율서상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7. 기타사항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성범죄·교통사고,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대여금·공사대금·손해배상, 보험금 등 각종 금융사건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